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

- 기독교적 경제관에 입각한 대안 모색을 위해 -

백성욱

1. 문제의 제기

최근 한국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업자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LG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물론이고 모건스탠리·JP모건 등 해외 금융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져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4대 부문의 구조 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되고 기업들의 정리 해고가 상시화 되면서 언제 직장을 그만 둘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직원을 대량 채용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하면서 대학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지못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IMF 체제를 2년만에 극복했다는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IMF 체제 이후 더욱 악화된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는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와 수많은 사람들을 거래로 내쫓았으며 임금삭감과 소득감소·부동산 및 주택가격의 하락을 촉진시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급격하게 하락시키고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의 생활고로 이어져 노숙자가 양산되고 자살자와 범죄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 그러나 IMF의 고금리 정책으로 현금을 소지한 일부 부유층은 막대한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이를 통해 이른바 “이대로족”이라는 신흥권층이 생겨나 소득불평등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막대한 차익을 올린 부유층이 생겨났고, 해외여행객 수가 IMF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간차는 있지만 서구 선진국은 이미 70년대 중반에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중남미와 동유럽은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이후까지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우등생으로 주목받던 일본과 동아시아도 97년 외환위기로 치명타를 맞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구제금융을 받았던 많은 국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가들이 우리처럼 실업과 빈부격차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경우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위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선진국과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계화로 인해 통합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는 대신 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경제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 3세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IMF체제가 왜 실업·빈부격차 같은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IMF등 국제기구의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활동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일부 국가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실업과 빈부격차 심화는 물론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확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글은 그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경기변동 과정을 고찰하고 불황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출현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본 후 기독교적 경제관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제시 가능성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2. 번영, 퇴조, 그리고 반동

1) 자본주의의 황금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경제는 1945-50년까지 조정기를 거친후 70년대 초반까지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Capitalism)를 구가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경제적 번영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했다. 당시 상황을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의 저자 필립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호황기의 가장 큰 특징은 숨막히는 성장이었다. 1973년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생산은 1950년보다 180% 증가했다. 이 25년 동안 생산된 것은 그 이전의 75년 동안 생산된 것보다 많았으며, 인간 역사상 어떤 25년보다도 몇 배나 많았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낸 2차 대전을 겪은지 불과 5년여 만에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대략 세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미국 주도이래 세계경제의 운영 틀이 마련됨으로써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던 서방세계가 경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1947년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소간의 냉전(Cold War)이 본격화되자, 사회주의의 침투를 막기위해 유럽·일본 등 서방세계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가 시작된다. 유럽에 대해서는 전후복구 지원과 통화안정을 위해 약 200억불 규모의 경제지원 프로그램인 “마셜 플랜”이 시행되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는 유럽과 일본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연합국의 국제통화금융 회의에서 IMF(국제

통화기금)와 IBRD(세계은행)이 설립되었다. 여기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 및 달러와 여타국가들의 통화와의 교환비율을 일정범위에서 고정하는 고정 환율제가 결정됨으로써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둘째 戰前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시작된 포드주의 생산 방식이 전 사업분야에 도입되면서 생산과정의 세분화와 자동화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노동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해 막대한 규모의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노동분업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실질 소득이 향상되어 대량소비 사회 등장을 촉진시켰다.

셋째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이 경기불황 극복 이론인 케인즈 이론을 채택해 불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장기 호황을 가능케 하였다. 케인즈 이론은 시장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이론이다. 기존 경제학계는 세이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공급중심 이론에 기초하면서 시장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고전파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고전파 경제학은 완전한 시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동조절됨으로써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시작된 대공황 상황에서 고전파 경제학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시장의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고전파 경제학의 시장만능주의와 공급중심 사고를 비판하면서 수요중심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케인즈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로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의해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국가는 기존의 자유방임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 및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총수요가 확대되어 과잉생산 상황이 해소되면 자본주의적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은 서방세계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어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국 경제정책에 반영되었다. 또한 과거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 부흥이라는 경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전후 서방세계가 복지국가 건설에 나서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케인즈 이론은 소득재분배와 각종 사회보장 제도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포드주의 생산방식 도입으로 본격화 된 대량생산체제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대규모 시장의 확보라는 외부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세계경제는 20여년에 걸친 장기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국가에 따라 단기적인 경기하강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일본 등 서방세계 전체가 생산력의 엄청난 증가를 경험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호황은 60년대 후반부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더니 70년대 중반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하게 된다.

2) 불황의 도래

한없는 성장만 계속될 것 같던 세계경제는 60년대 후반 성장률이 저하되는 조짐을 보이더니 70년대 초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불황의 도화선이 된 것은 석유가격의 폭등이었다. 1973년 10월 시작된 아랍과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을 계기로 OPEC은 석유가격을 배럴당 3달러에서 11.65달러로 4배나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세계 경제는 급격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일부 국가나 지역경제의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과거 황금기의 성장률과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정책입안자들과 지명한 경제학자들조차도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경기 변동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단언케 했던 호황이 끝나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상 경기침체를 야기한 OPEC의 유가 인상이 주된 요인이었을까? 아니면 또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사실상 OPEC의 유가인상은 경기하강에 방아쇠를 당긴 것에 불과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알을 장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은 발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가폭등 이전에 이미 경기침체의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었으며 유가폭등은 이것을 촉발했을 뿐이다.

경기침체를 야기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에 있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이윤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60년대 중반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것이 1973년에는 거의 30%나 저하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기업 전체의 이윤율은 1966년에 22.3%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1973년에는 14.8%로 폭락했고, 제조업의 이윤율도 1966년 34.9%로 최고수준을 기록했지만 1973년에는 22.5%로 하락했다. 이윤율은 자본투자자들의 투자 능력과 투자의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경기상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급격한 이윤율의 저하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대체로 세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60년대 후반 선진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철강·가전부품 등이 수요 감퇴·경쟁격화·과잉설비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오염이나 제품의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수익을 낳지 않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수익 구조가 더욱 악화되었다.

둘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격화되면서 임금수준과 사회복지비용 부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해 수익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근로자들은 포드주의 생산 시스템의 단순 반복 노동에 염증을 느끼고 무단결근·사보타지 등으로 대응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셋째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제통화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국제무역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고, 이는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본위제 유지를 위해 달러 가치의 안정적인 유지와 미국의 일정 양의 금 보유를 전제로 했다. 또한 고정환율제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각국에게 통화 가치의 유지를 위해 각자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부과하는 제도였다.

이처럼 현실 경제상황에 비추어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 아래 출발했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60년대 중반이후 미국 민간 자본의 국제화와 베트남 전쟁에 따른 달러의 과잉 공급으로 막대한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즉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대외신뢰도(가치)가 하락하자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는 골드러쉬(Gold Rush,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는 대소동)가 수차례 발생하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달러를 투기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제거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달러의 금 태환을 폐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이후 76년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열린 IMF 총회에서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전후 자본주의의 호황기를 가능케했던 국제 경제질서의 틀은 폐기되었다. 또한 변동환율제는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투기행위를 벌이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득분배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케인즈 경제학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케인즈의 처방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제공황을 소비촉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잉생산 문제를 야기하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 개입을 통해 해결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데 70년대 중반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질소득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재화의 가격만 올라감으로써 불황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케인즈 경제학이 변화된 경제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자 과거의 명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나친 경제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가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시장의 부활을 요구하는 이론과 정책들이 서서히 대두되었다.

3) 시장의 부활

1974-75년 시작된 공황과 그 이후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케인즈적 처방의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자 불황타개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략 세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첫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포드주의 생산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생산시스템 즉 탈포드주의 생산 양식을 도입한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도입했던 JIT(Just In Time, 적기생산방식)·하청 계열화·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다(이를 도요티즘이라 한다). 이들 탈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외형상 팀작업 도입·근로자 참여제도 보장 등으로 근로자들을 포드주의 생산방식의 단순반복노동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하강 일로에 있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둘째 자본의 국제화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등장이다. 자본의 국제화는 개별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윤을 추구하던 기업들이 이윤을 저하 경향을 탈피하기 위해 표준화된 공정을 세계적으로 분할하는 해외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초국적 금융자본은 실물부문에 대한 투자가 높은 이윤을 보장해 주지 못하자 등장하기 시작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축적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변동 환율제가 도입되고 정보 혁명으로 전 세계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면서 촉진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초국적 금융자본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이후 세계 각지의 외환 위기를 유발하는 주범이 되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탈포드주의 생산방식과 자본의 국제화 및 초국적 금융자본의 움직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자본의 활동 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국가개입주의 폐기와 시장의 부활”을 외치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반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그 남겨진 공간을 시장으로 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장지상주의”이론이다. 시장은 사회의 자원을 가장 효율

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므로 국가 등 제 3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경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시장이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정하는 것 또한 국가보다는 시장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론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크게 통화주의·합리적 기대학과·공급중시 학파·공공선택이론·하이예크의 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예외 없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국가 부분을 축소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 자본 운동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관계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함으로써 이윤을 저하 경향을 보이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처음 신자유주의는 전후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던 케인즈 경제정책을 대체하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기능한다. 그리고 점차 사회재편의 이데올로기로서 그 범위가 확장된다. 신자유주의가 정책 이념으로 최초 도입된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었으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점차 제 3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아래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확산된 과정과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신자유주의의 확산

1)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등장

케인즈주의의 대항이념으로 대두되고 있던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도입된 나라는 노동조합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영국과 미국이었다.

영국은 1974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완전고용과 케인즈적 예산팽창을 통한 경제회복을 내세우며 집권했으나, 경제를 희생시키는데 실패했다. 70년대 내내 경제 성장률은 평균 2.2%에 머물렀으며, 반면 물가는 매년 평균 13%씩 상승했고, 실업률은 6%로 치솟았다. 정부는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됐고 국제수지는 매년 4억 파운드 이상의 적자를 내며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했다. 그러자 노동당 정부는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1975년부터 3년간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석유 파동에 이은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1978년과 1979년 대규모 파업으로 대항했고 이로 인해 노동당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등장한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영국 경제를 몰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노동조합과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것 등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표현되는 일련의 정책들은 1970년대 불황아래서 허덕이던 미국경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레이건은 취임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정체 그리고 국제경쟁력 상실이라는 미국경제의 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 시카고 학파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다. 이들의 주장은 규제완화·감세·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었다. 공급주의 경제학을 받아들인 레이건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기업가의 투자이욕 회복을 위한 감세 및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취했다.

2) 신자유주의의 제 3세계로의 확산

제 3세계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주된 원인도 경제위기에 있다. 그러나 주요산업의 이윤을 저하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 선진국들과 달리 중남미·동유럽 및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 불황에 접어들게 된다.

먼저 과도한 외채에 시달리던 중남미 각국은 80년대 초반 미국이 금리를 상향조정하자 엄청난 이자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더욱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국가경제가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연달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IMF에 의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또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회주의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롭게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동유럽 각국은 중앙계획경제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자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IMF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세계 전반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경이적인 성장률을 자랑하던 동아시아 국가들도 97년 태국의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한국이 연이어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IMF 관리체제로 편입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한 동인은 무엇일까?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대체로 3개국 이상에 걸쳐 활동하는 약 4만개 정도의 초국적기업과 투자할 곳을 찾아 빛의 속도로 전산망을 통해 움직이는 수십 조 규모의 초국적 금융자본,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IMF·IBRD·WTO등 국제기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 초국적 금융자본과 IMF는 제 3세계의 경제위기 유발과 위기극복 해법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강제라는 상반된 역할을 수행했다. 이윤을 보장해주는 곳이라면 국경을 넘어 세계 어느곳이든 찾아가는 금융자본은 70년대 이후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들은 주로 경제성장이 한창이던 동아시아·중남미 등에 직접투자 형태로 거액을 투자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그러나 이들 금융자본중 상당부분이 투기적 성질을 갖고 실물부문이 아닌 금융부문에 투자되었는데 이는 자본자유화 등과 맞물려 국가의 통제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이들 금융자본은 해당 국가가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동안은 이윤추구를 위해 투자를 유지하지만 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더 나은 투자지역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이탈하거나 해당국 통화를 공격함으로써 해당국가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80년대 이후 중남미 경제위기와 1997년 태국을 시발점으로 확산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이들 투기적성격의 초국적 금융자본 때문에 촉발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경제위기를 맞이한 제 3세계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의 집행기구로서 IMF와 IBRD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인 국제경제연구소 소속 윌리엄슨이 외채위기의 해결방안으로 강구한 1985년의 베이커플랜을 1989년 브래디플랜으로 보완하면서 제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IMF와 IBRD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경제체제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제도의 건전화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제 3세계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내용의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산축소·공기업 민영화·규제완화·자본시장 자유화·외환시장 개방·관세인하·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

병 허용 등이 그 구체적 내용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제3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도입 이유와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은 제 3세계가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게 된다.

3) 신자유주의 정책 내용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중요한 정책내용으로는 정부의 개입축소에 따른 긴축정책·기업에 대한 감세·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있다.

먼저 국가의 시장개입이 경제불황의 원인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시킬 것을 주장한다. 정부지출의 상당부분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들 부분에 사용되는 돈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케인즈주의 시절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복지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삭제되기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장치들이 사라진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지나친 세금 및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의욕을 회복시킨다는 명분아래 대규모 감세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직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간접세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부유층들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영국의 경우 최고소득자의 세금을 83%에서 40%로 절반이상 감해주었으며 미국은 여러 가지 감세조치로 1,100억불의 조세수입이 감소했다. 그러나 직접세가 줄어들고 간접세가 늘어나게 되자 소득의 역진성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율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사회 양극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켰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시장을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 즉 임금 인하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실시했다. 정리해고제가 상시화되고 정규직 고용자의 비정규직화가 급증하면서 노동자들은 케인즈주의 시절 형성되었던 노자간 힘의 균형을 상실한채 실업의 불안속에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양육강식의 정글로 내던져진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미국은 90년대초 클린턴 정부의 등장과 함께 경기가 상승해 최근까지 장기간의 호황을 누렸으며, 영국도 고질적인 “영국병”을 떨쳐버리고 유럽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위상을 서서히 회복해 나가고 있다. 독일도 슈레더 총리 집권이후 10년만의 최대 호황을 만끽하면서 사민당의 재집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각종 연구보고서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주장대로 파이를 크게 만드는데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열매를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었던 것을 아니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보는데도 시장의 원리가 도입됨으로써 “일인 일표”가 아닌 “일원 일표”의 냉혹한 경쟁의 원리가 작용했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승리한 자만이 풍요의 과실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완전무결한 것도 아니었다. 국가의 실패가 존재하듯이 시장의 실

패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전지전능한 시장을 신뢰했던 신자유주의는 현실과 부 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4.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대두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시장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시장은 자발적으로 구성되고 조정되는 질서로 사회에 산재해 있는 자원들이 시장을 거쳐 가장 합리적으로 분산·수렴된다. 따라서 시장은 인류역사 속에서 생성된 가장 진보적인 장치이며 개인적 자유의 기초가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며 거대한 독점자본 등에 의해 가격 및 자원 분배의 왜곡이 발생하고 공공제와 외부효과 등의 문제가 상존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Stiglitz)의 표현을 빌리면 “발가벗은 임금님의 동화에서 임금님의 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옷이 없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가정에 기초하여 경제와 정치를 조직하려는 신자유주의 운동은 실현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서 공간적·계층적으로 이익을 불균등하게 분배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1) 계층·지역간 부의 집중과 소득불평등 심화

신자유주의적 개혁처방은 각 국가들에게 안정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이윤동기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오던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국가 규모를 축소하며 가난한 국민들에게 주어졌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강요하였다. 사실상 신자유주의자들은 전후 노자간 타협에 의해 구축되어온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층이 투자이익과 근로이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도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도 사회복지비는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직접 도움을 주지 않고 저소득층의 자립의지를 약화시켜 사회전체적 효율을 떨어뜨리는 만큼 과감히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자기조절적 가격장치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생산요소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공급을 확대해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감세·탈규제·복지지출 감소를 통해 나타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와 소득 불평등 구조 심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 각국 및 최근 IMF프로그램을 받아들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부의 집중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2/4분기 통계청 조사에서 도시 근로자 상위 10%와 하위 10%간 월 평균 소득이 9배나 차이내고 있으며, 저축·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을 포함했을 경우 2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초반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2000년을 기준으로 상위 5%의 소득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고 상위 5%와 하위 20%간 소득격차가 8.2로 지난 29년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호황의 과실이 부유층에 집중되었으며 저소득층은 부의 축적을 위한 고속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95-98년 사이 연간 소득 변화를 살펴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95-98년간 연간 소득이 5만 - 10만불인 고소득층은 95년 141만불에서 98년 173만불로 22.3%증가했고, 연간소득 만 5000-5만불인 미국 중산층의 재산은 6만 300불로 6.3% 증가한 반면, 연간소득 1만-2만 5000불인 가구는 순재산이 95년 3만 1000불에서 98년 2만 4800불로, 연간소득 1만불 이하 가구의 순재산은 4800불에서 3600불로 감소했다. 더구나 99년을 기준으로 극빈층 숫자가 전국민의 10%를 상회하는 3100만명에 이르고 1200만명의 어린이가 굶거나 굶주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을 통해 거대한 금융자본의 초국적 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이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경제구조가 취약한 제 3세계 경제를 유린하고 이윤을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국가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IMF나 IBRD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이때 IMF나 IBRD는 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자원과 노동력은 물론 자본시장까지도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에게 개방하라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강요했다. 이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제 3세계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고스란히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손에 침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세계적 차원에서 후진국과 선진국의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후진국이 경제구조를 더욱 선진국 의존형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빈곤의 세계화”저자인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이익을 무시한 채 선진국들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빈곤의 세계화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2) 실업의 증대

신자유주의적 위기해결 방안은 노동시장에도 “경쟁과 이윤의 논리”를 적용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제 도입·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 제도화됨으로써 근로자들은 항시적인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는 한편 실질임금의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과거 케인즈주의 시절 형성되었던 노자간 코포라티즘적 타협체제가 무너지고 냉혹한 시장의 정글로 내던져지게 된 것이다.

기업에 의한 해고가 자유로워지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명목아래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 시절 민영화를 통해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항공관제사 파업당시 참여했던 관제사 만 2000명을 전원해고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의 실업률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ILO(국제노동기구)가 발

표한 2001년도 세계 고용보고서에서 지난 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20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늘어났으며 현재 전 세계 근로자 30억명 가운데 1/3인 10억명이 실업자이거나 준실업자라고 밝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의 내용과 안정성인데, 신자유주의는 고용의 유연화를 주장하며 노동의 시·공간적 동시성을 깨뜨리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형시간근로제·파견근로제·정규직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등은 유연화 공세가 법제화된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제 고용에 대한 개념자체가 질적·양적으로 변화되어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을 완전고용으로 받아들였던 전통적인 인식은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등 임시적 고용 확대와 더불어 바뀌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의료보험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고용불안과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제 3세계 노동자들은 경제위와 뒤이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어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우리나라도 IMF체제에 편입된 첫해인 98년에 실업률이 10%에 육박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했으며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중남미 국가는 20%이상의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들 제3세계 국가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사회보장 체계가 미비해 실업이 곧바로 생존의 위기로 직결되어 실직자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범죄자가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IMF구제금융의 상환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있어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5. 대안의 모색: 기독교 경제관을 근거하여

1) 반(Anti) 신자유주의 진영의 등장과 순응주의의 확산

이처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실업자의 양산과 빈부격차 심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자 이론과 실천면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반대그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지식인과 NGO 단체 등은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면서, 서방 선진국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이념생산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총회(1999.12, 미국 시애틀) 및 IMF-IBRD 총회(2000.9, 체코 프라하) 개최장소에서 기습적인 가두시위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이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항담론들도 학계내에서 다양한 행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맑스주의로의 복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진보진영과 케인즈주의의 국가개입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주류학계의 움직임으로 대별된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내포되어 있어 이론적 함의를 분석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에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NGO 단체들과 학계의 이런 다양한 실천적·이론적 모색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지식인 및 NGO 대부분이 특정한 조직체계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다 이해관계마저 다양해 이들은 하나의 세력으로 묶어내기가 쉽지않다.

또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NGO 대부분이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문제분석과 대안제시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가 잠복해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한 실업·노동환경 악화·환경 파괴·종교적 가치과 상실·교육의 질 저하 등과 같은 선진국 중심의 의제가 빈곤 퇴치·지역민 보호·국가간 경제적 평등·전통문화 유지 등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주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민사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제 3세계 국민들에게 이런 반대운동이 얼마나 현실감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항이론 모색의 경우도 대부분이 현상과 부작용에 대한 분석과 비판 부분에서는 정련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대안제시 부분에서는 사회운동 집단간의 연대 강화·민주주의의 확장·생산의 통제 등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국·독일 등 서유럽의 좌파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소위 “제 3의 길”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들을 적당히 혼합해 놓은 절충주의에 불과하며 신자유주의 주요 이념들을 화려한 수사로 포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 수준을 넘어서 이미 우리 현실생활이 되어 버렸으며 이를 극복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곳곳을 지배하는 생활양식이자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천과 이론 모두에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경제분야를 넘어 사회 전분야와 인간 생활 곳곳에 침투한 경제논리는 이러한 대항과 극복의식을 북돋우기 보다는 이미 형성된 기존 질서에 적응하고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구축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사회주의가 동구권의 붕괴로 이론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자본주의의 환회에 찬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고삐풀린 자본에 재갈을 물릴 수있는 대항담론의 모색은 더이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패배의식이 만연하고 자본이 역사의 최종 승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현실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의 원칙을 현실로 인정하고 자본이 뿜어내는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에 눈감은채 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일까? 더 이상의 대안 모색은 시간낭비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불의한 시대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론 모색과 실천을 통해 해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로 지금이 그 어느때 보다도 그런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기존 사회주의 이론이 실효성을 상실했고 진보진영과 학계가 대안제시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대안모색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기독교적 경제관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제시 가능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2) 기독교 경제관

인간에게 있어 경제생활은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본원적인 생활이다. 그러면서도 그 경제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가 경제활동을 하는 세계가 어떤 구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의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아래 살고 있는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서 돈을 벌고 생산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경제생활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커다란 맥락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성경은 창세기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물적 토대인 “자연”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개인적인 재능과 능력은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천연자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우리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연물들을 사용한 방식과 목적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즉 자연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은 자연을 선하게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 받았다는 “선한 관리자로서의 인간”일 뿐이다. 이러한 생각이 기독교 경제관의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일상의 경제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들을 우리의 편익과 효용만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경제생활 가운데 피조물의 사용에 대한 절대적 자유방임을 제한하고 선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경에는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노동은 인간의 타락에 따른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축복이다. 성경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창 1:28)고 요구하셨으며, 에덴동산을 운영하고 돌보는 사명을 아담에게 부여하셨다. 시편에서는 노동은 해가 뜨는 것이나 사냥을 하러 나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시 104:23)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노동하는 인간”의 모습에 창조 질서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위탁받은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탐욕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들을 자신과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이든 단체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원이나 부를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배풀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제시한 율법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 버려두라”(레 19:9-10)

이외에도 소산의 십분의 일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쓰라든가(신 14:28-29), 가난한 자에게 돈을 무이자로 꾸어주고 7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내용도 있다.(신 15:8-10) 더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전 생애를 통해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로 일관하셨던 사실을 통해서도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연 자원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는 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특정계층이나 국가가 경제적 이권을 독점함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것을 경계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고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밝힌 것이라 할 것이다.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자가 토지를 팔았을지라도 희년을 맞이하면 그 토지를 돌려받는다는 사례는 부에 대한 지배권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재화의 정의롭고 공평한 분배를 위해 통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잠 29:2-4, 31:8-9, 렘 22:3, 22:15-16) 성경은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원과 복을 성실하고 정의롭게 관리하지 못한 자들은 빈곤을 조장하고 그것을 방치하며 가난한 자들을 충분히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 하는자는 저주가 많으리라(잠 28:27)

셋째 성경은 사회적 부의 개념에 대해 기존의 통념과 다른 정의를 내리면서 사회적 부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 헛된 부를 좇아 귀중한 시간과 정령을 낭비해서는 안되며(딤후전 6:7-10), 2) 부가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잠 340:8-9, 딤후전 6:7-8, 히 13:5-6) 3) 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인간은 그것의 절대적 소유자가 아니고, 4) 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잠 11:28, 시 52:1-7)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의 경제관은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경제시스템으로 군림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기본적 전제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재화에 대한 “선한 관리자로서의 인간” 개념은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인 사유재산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유재산제도는 자유시장제도와 함께 자본주의가 유지 발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 권리는 바로 사유재산제에 의해 그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이 확립되고 난 이후부터 빈부격차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사회적 재화의 절대적 소유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피조물들의 관리자라고 정의함으로써 개인적 소유권의 절대성과 재산권 행사의 무제한성을 부인하고 부의 집중과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력과 이윤율의 향상을 통해 절대적 부의 향상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데 반해 성경은 부의 크기를 무조건 키우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적절한 부의 소유가 옳바르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8-9)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딤후 6:7-8)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생산력 증대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전제가 옳바른 것이 아니며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사적소유의 절대화와 물질적 부의 증대에 사로잡힌 자본주의의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모색의 가능성

지금까지 기독교적 경제관의 내용과 그것이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경제관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관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본틀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이윤을 저하로 인하여 야기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시장제도라는 또다른 대전제를 강화하면서 도입된 이론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와 그 기본전제 및 활동 동인에서 차이가 있는 기독교적 경제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 본다면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하는 것도 그리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경제관을 바탕으로 한 대항담론의 모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장과 자본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오래된 논쟁 가운데 하나는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자본주의가 출현한 이래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또 그러한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 그런데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특정 시기에 발견되는 경제의 불안정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정부의 부족한 개입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승리의 기초는 케인즈 이론의 적실성 상실과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로 인한 반사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실업 등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상존하는 한 신자유주의의 승리가 “국가개입주의”를 완전히 폐기처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성경에서 경제적 정의를 위해서는 국가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상 현실사회에서 시장의 횡포를 막아 줄 수 있는 존재는 국가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장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단순히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고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윤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는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상품화시키는 자본과 시장의 비정함과 비인격성을 교정하고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지배계급의 이익 실현을 위한 집행위원회일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선한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행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이는 또한 그동안 자본의 이윤 극대화과 무차별적 경제성장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국가권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 형태·임무·기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나친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국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등과 형평성을 앞세운 국가의 개입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간에서 차단하고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이외에 시민사회라는 제 3의 섹터가 발전·성숙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시장과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성장제일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탈피한다면 거대 자본의 막강한 공세앞에서 존엄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로날드 사이더, IVP)
 공동체, 국가와 교회(칼 바르트, 엠마오)
 기독교 경제학(김세열, 도서출판무실)
 기독교 세계관(아더홈즈, 엠마오서적)
 성서의 정치경제학(두크로, 한울)
 칼빈의 경제윤리(앙드레 비엘러, 성광문화사)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로널드 헤이, IVP)
 현대, 이상, 이데올로기(하웃츠바르트, IVP)
 강요된 신화 - 세계화와 진보경제정책(백영현, 새물결)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김성구, 문화과학사)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노엄 촘스키, 모색)

빈곤의 세계화(미셸 초스도프스키, 당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안병영 외, 한울)

세계화의 뒷(해럴드 슈만 외, 영림카디널)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강상구, 문화과학사)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위너 본펠드 외, 갈무리)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세계체제론의 시각(조반니 아리기 외, 공감)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컨센서스(윤소영, 공감)

이행의 시대(이매뉴얼 윌러스틴, 창작과 비평사)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크리스 하먼, 갈무리)

허울뿐인 세계화(헬레나 노르베지 호지, 따님)